

‘킵라니’ 사고 줄어드나... 정부 안전관리 강화 나서

킵보드+고라니 합성어

전동킵보드 사고로 작년 24명 사망
도로교통법 위반 적발 건수도 늘어
정부, 민·관 협약으로 방안 마련
최고속도 25→20km 하향 조정
광주시, 환승 주차장 조성 추진

전동킵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면서 관련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의 안전 주행 문화 조성과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및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최고 속도 하향 조정 등의 안전 조치 강화 방안을 추진, 사고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도로 위의 무법자, 일명 ‘킵라니(전동킵보드와 고라니 합성어)’로 불리며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킵보드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동킵보드 사고 건수는 △2019년 447건에서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 △2023년 2389건으로 매년 급격히 늘었다. 4년 만에 5배나 늘어난 것이다. 사망자도 2019년 8명, 2020년 10명, 2021년 19명 2022년 26명, 2023년 24명에 이른다.

광주에서도 지난 7일 광산구 승용교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60대 대리운전 기사 A씨가 승용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전동킵보드를 타고 승용교를 건너다 넘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승용차 운전자 B씨는 “주변이 어두워서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B씨는 무면허나 음주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동킵보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

거 도로 주행이 원칙이나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는 차도 우측 차선으로 통행할 수 있다. 하지만 유동 인구가 많고 자전거 도로가 마련되지 않은 도심에서는 인도와 차도를 경계 없이 누비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대학생 노윤아(21)씨는 “전동킵보드가 길가에 마구잡이로 방치되면서 못 보고 지나가다 부딪혀 다친 적도 많다”며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건 알겠지만 반납 관리가 미흡하다”고 토로했다.

직장인 박서연(31)씨는 “운전하다 보면 전동킵보드가 갑자기 튀어나와 깜짝 놀랄 때가 많다”며 “안전장치도 없이 두세 명이 동시에 타는 모습을 보면 넘어질까 봐 위험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동킵보드는 무면허인 청소년 이용자가 많고, 안전모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많아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킵보드 단속 건수는 2022년 8224건, 2023년 9112건, 올해는 6월까지만 해도 9970건이 적발됐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음주 △정원 초과 등 순으로 적발 건수가 높았다.

전동킵보드로 인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자 정부는 안전 강화 조치를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국토교통부·경찰청·도로교통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10곳·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에 따라 업체들은 자사의 전동킵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기존 25km에서 20km로 하향 조정한다.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 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에 대한 집중단속도 이뤄진다. 2주간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8월부터 2개월간 집중단속이 진행된다.

이올러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이용층인 10·20대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하지만 이번 협약에서 전동킵보드 무단 방치와 관련 대책이 제외되면서 통행 불편 해결과 안전을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광주시는 전동킵보드 전용 주차장을 조성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교통운영과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전동킵보드 환승 주차장을 조성해 현재 서구 10곳, 북구 50곳 등 총 60곳이 마련됐다”며 “자리 선정 등 절차상 이유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나 지자체와 협의해 추가로 환승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승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동구청 앞 도로 확장 공사장 ‘광주읍성’ 흔적 발견

집터·창고터 등 확인...정밀조사

광주 동구청 앞 도로확장 공사 예정 구간에서 광주읍성의 흔적이 발견돼 정밀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11일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에 따르면 최근 광주 동구청에서 조선대학교 사거리 구간 도로 확장공사(375m) 부지에서 옛 유적지와 유물 조각이 발견됐다.

유적은 옛 집터와 창고터, 기와 조각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적은 도로 확장공사를 본격 진행하기 앞서 유물 존재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한 시굴조사 용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건설본부는 유적지 수, 추정 연도 등을 분석한 뒤 국가유산청에 보고할 계획이다. 국가유산청은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굴조사를 요청한다.

동구청-조선대 사거리 도로는 현재 왕복 4차로(20m) 구간으로 조성돼 있다.

노병하 기자

차량 통행량이 많아 오는 20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왕복 5차선(30m) 확장이 추진됐다.

광주시 문화유산위원회는 공사 구간이 문화재자료 20호 ‘광주읍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돼 시굴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광주읍성은 1378년~1379년 왜구의 침입으로부터 고을을 방어하기 위해 평지에 축성됐다. 당시 관리가 머물며 지역의 행정·군사를 관장했다.

또 지난 5월에는 유적지가 발견된 지점 인근의 ‘문화전당 주변도로 확장부지’에서도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청자 저부와의 등 11점, 조선시대로 추정되는 자기·기와 19점 등 총 30개의 유물이 발견됐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유물이 다수 발견됐기 때문에 추가 정밀 발굴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광주 교육단체 “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폐기해야”

광주 교육단체가 최근 광주시의회가 수리한 광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조례 폐지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오전 광주교육시민연대(시민연대)는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에서 조례 폐지안에 대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며 “즉각 조례 폐지안을 폐기하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권 등 상위법을 위반하는 등 주민조례발안법 제4조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에 해당해 논쟁할 가치도 없다”며 “조례 폐지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이 인권 상담, 구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한 민주인권교육센터, 학생인권 구제 소위원회 등 행정기구가 없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시의회가 조례 폐지안 처리에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시의회는 ‘청구인 명부가 이상 없다’는 강변만 늘어놓을 뿐, 법령

위반 여부 등 청구대상에 대한 사전검토는 없었으며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며 “시의회 전반기의장은 시민사회 면담을 통해 ‘의원들을 설득해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겠다’며 굳게 약속했는데, 전반기 의회가 마무리되기 직전 기습적으로 조례 폐지안을 발의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반기 의회의 의장, 상임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그 누구도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거나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같은 조례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타 시·도의원들과 명백히 대비된다. 지금이라도 시의회는 조례 폐지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광주 일부 시민들이 주민조례 청구 제도를 통해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임위가 심의하도록 수리·의결했다.

강주비 기자



7월 11일 전국연합학력평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11일 광주 서석고 3학년 학생들이 교실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다.

나건호 기자

‘7억원대 마약’ 유통·투약 불법체류 태국인 부부 검거

영양제로 둔갑시켜 외국인에 판매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에서 대량의 마약류를 유통한 불법체류 태국인 부부가 긴급체포됐다.

11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경찰·국가정보원과 함께 지난 9일 외국인 밀집 거주지 일대에서 마약류를 대량 유통하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법체류 태국인 30대 A씨 부부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은 ‘불법체류 태국인들이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적으로 대량의 마약을 판매한다’는 제보를 입수,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벌여 A씨 부

부를 검거했다.

국내 체류 자격이 만료된 A씨 부부는 동남아에서 유통되는 메스암페타민 계열 합성 마약인 ‘야바’를 태국 현지 영양제 포장지에 감춰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밀수입 단계부터 단속을 피하고자 마약을 영양제로 위장해 유통한 것으로 파악된다.

A씨 부부의 나주 소재 임시 거주지에서는 7억8000만원 상당의 야바 1만1207정이 발견됐다. 이는 그동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산하 단속반에서 적발한 마약 적발 사례 중 가장 많은 양이다.

또 A씨 부부는 검거 당일에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경찰은 A

씨 부부를 입건해 조사 중이며, 부부 모두 마약류 투약·판매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수도권에 거주하던 A씨 부부가 최근 전국 각지에 늘어난 불법 체류 태국인을 상대로 마약류를 판매하기 위해 광주·전남지역에 온 것으로 파악했다.

광주출입국은 형사 절차가 끝나는 대로 A씨 부부는 강제 퇴거·입국 금지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다른 기관과 함께 불법 체류 외국인의 마약류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남구 공무원 노조 “남구의회 정상화” 촉구

11일 성명문 내고 ‘파행’ 규탄
‘의정비 자진 반납하라’ 요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남구지부(이하 남구노조)가 남구의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남구노조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의원들의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인 의정활동을 보며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의원들

은 즉시 의회를 정상화하고 의회 파행 사태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남구노조는 “지난 9일부터 열릴 예정이던 제304회 임시회는 상임위원장 자리 다툼이 발단이 돼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됐고 의원들 간 이전투구는 갈수록 점입가경이다”며 “의회 파행으로 인해 업무보고, 조례안 심사 등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구정 차질이 불가피해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으면 불만이 있더라도 결과를 존중하고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다”면서 “누구보다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의원들이 보란 듯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구노조는 또 “의원들의 밥그릇 싸움 때문에 의회는 개점휴업 상태”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일하지 않은 대가로 의정비를 자진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박찬기 기자